

'97행정사무감사시증인출석요구(안)

기 획 경 제 위 원 회

'97행정사무감사시증인출석요구

일 정	대 상 기 관	출석요구대상자	장 소	비 고
11월21일(木) 10:00	○공보관실	- 공보관	기획경제위원회실	
11월24일(月) 10:00	○감사실	- 감사실장	//	
11월25일(火) 10:00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예산담당관 - 법무통계담당관 - 전산통계담당관	//	
11월26일(水) 10:00	○공업경제국	- 공업경제국장 - 경제과장 - 기업지원과장 - 공업진흥과장 - 기술진흥과장	//	
11월27일(木) 10:00	○청주의료원	- 원장 - 관리부장 - 총무·원무과장	//	
11월28일(金) 10:00	○충주의료원	- 원장 - 관리부장 - 총무·원무과장	//	

제1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부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문 28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문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급격한 속도로 산업사회로 탈바꿈 하면서 수도권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국토의 불균형적인 개발을 가져왔으며 이로인해 지역간 갈등이 상존해 왔다.

이에 정부는 70년대 초반부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더욱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는 대형 국책사업이 성장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고루 유치되는 듯이 보여졌다.

그러나 10월6일 입법예고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354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중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하여 지금의 집중규제에서 대폭 완화로 선회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청북도민의 중지를 모아 본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70년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도권 정책을 완화로 급선회 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지방중심의 경제활

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불과 6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정면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모든 정부정책에 관해서 국민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 대상이 대학,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큰 시설위주로 되어 있어 수도권외 과밀화 현상이 가중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특히 수도권 공장의 총량 규제대상 제외시설은 결국 기업의 생산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지방이전업체의 격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우리도의 경우 벤처기업 등 21세기형 첨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설중에 있는 오송 보건의료 과학산업단지, 오창·충주·왕암 과학산업단지내 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 특화산업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업은 특성상 경영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입지를 선호하고 있어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으로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의 분산 정책,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정책 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으로 인구 및 기업의 역집중화 현상이 우려된다.

다섯째, 국가지정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향후 조성될 계획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1997.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